



◇(사)강원경제단체연합회 제9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18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최돈진 회장이 이임하고 오인철 신임회장이 취임했다. 신세희기자

“현안 공동대응 지역경제 구심점 역할”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총회
신임 오인철 회장 추대
부회장 천세복·노정협

강원경제단체연합회(이하 강경연) 제2대 회장에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이 추대됐다.

강경연은 18일 베니키아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2년 임기가 만료된 최돈진 초대 회장의 후임으로 오인철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신임 부회장에는 천세복 도관광협회장과 노정협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장이 선임됐다. 사무국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강경연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도지회와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회원단체에서 탈퇴하고 도이스콘공업협동조합,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신규 가입해 총 32개 회원사가 됐다. 이날 고문으로 추대된 최돈진 회장은 “평창올림픽

픽 성공 개최, 소비 촉진 캠페인 등 지역 경제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중국, 베트남, 미국 등에 경제시절단을 파견했다”며 “지역경제계의 의제 설정, 역량 강화의 구심점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 새얼굴 ●



오인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오인철(62)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은 “업종별로 다양한 도내 경제단체들 간의 공통 의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대응력을 높이고 도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경기를 잘 극복하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 흥천 출신.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을 수료. 도체육회 이사, 춘천상공회의소 상임의원을 역임. 태성종합건설 대표이사로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강원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 국무총리, 도지사 표창을 수상.

내년부터 수의계약 순번제 전면 폐지

강릉시 특정 업체 편중 계약 방지·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강릉】강릉시가 4년여간 시행 하던 수의계약 순번제가 내년 부터 전면 폐지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수의계약 순번제는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의 균형 있는 기회 제공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업체가 수주 하거나 전공분야, 공사여건 등이 배제된 채 일률적으로 업체 가 선정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에 순번제 시행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면서 그나마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춘 건실한 업체

들마저 동반 부실화가 염려된다는 등 업체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순번제 시행 이후 4년여간 한 번이라도 수의계약이 성사된 업체는 10여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당초 제도 도입 때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시는 수의계약 순번제를 전면 폐지하되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형평성을 감안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으로 업체의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근속 시 계약관리담당은 “각 부서에 지역 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지역생산물 및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건설기업체 사상 첫 7만개 넘어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 증가율 12년만에 가장 높아

2017년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건설업체 수가 큰 폭으로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7만개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17년 기준 건설업 조사 결과(기업 부문)’를 보면 지난해 건설기업체 수는 7만 2,376개로 전년보다 4.1% (2,868개) 증가했다. 금융위기 직전 부동산 시장이 팽창 하던 2007년(4.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건설업체 수는 2012년 0.3% 줄었다가 이듬해 다시 늘어난 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산업별로 보면 종합건설 업체는 10만619개, 기반조

성·건물설비·마무리공사 등 전문직별 공사업체는 6만1,757개였다. 각각 전년 보다 8.7%, 3.4% 늘어났다.

건설업 종사자 수는 167만명으로 전년보다 6.1%(9만7,000명) 늘었다. 2003년 (12.7%) 이후 가장 증가 폭이 크다. 직종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이 전년보다 7.0% 늘어난 90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직(43만 명), 사무직 및 기타(19만8,000명), 기능직(13만8,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건설공사 매출액은 392조원이었다. 전년보다 9.9% (35조4,000억원)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종합 건설업이 245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전문직별 공사 매출이었다.

새의자

오인철 강원경제인단체연합회장



오인철 (63) 제2대 강원경제인단체연합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들과 한 목소리를 내는 단체장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흥천 출신으로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현재 흥천 대성종합건설의 대표를 맡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흥천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부터 강원경제인단체연합회 부회장을 역임, 18일 제2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신관호



강원경제인단체협 임시총회 강원경제인단체연합회 제9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정만호 도경제부지사와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제2대 회장에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을 선출했다. 김명준 ▶새의자 22면

‘수의계약 순번제 폐지’ 건설시장 변화 예고

**시, 관급공사 계약 전면 개편
부실업체 수주 방지 기대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포함
특정업체 계약 편중 우려도**

강릉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관급공사 계약과 고용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시는 현재 시행중인 관급공사 수의계약 순번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현행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및 지역생산제품 우선 사용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강릉시의 이번 조치는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건설시장에서 계약과 고용 등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약**(수의계약 순번제 폐지)=시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한 수의계약 순번제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시는 “균형있는 기회제공 차원에서 순번제

를 시행했으나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가 수주하거나 전공분야, 공사여건이 배제된 채 일률적으로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면서 건설한 업체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번제 폐지에 따라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 등 예전의 부작용과 불만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최대영 회계과장은 “계약 편중 부작용이 없도록 공정·투명한 업무로 불만을 최소화하고, 설계단계부터 지역 생산품 및 업체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조례신

설)=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지역근로자, 건설기계 및 지역생산제품 우선 고용 및 사용을 위해 권장·노력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한 종합공사와 1억원 초과 전문공사, 8000만원 초과 기타공사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고,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최대영 과장은 “지역근로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자재 대금의 지급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라고 밝혔다. 최동열 dychoi@kado.net

건설업계 덮친 3대 한파... “내년이 더 춥다”

〈실적·구조조정·사정 ‘칼바람’〉

내년 사업을 준비 중인 건설업계에 '3대(大)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화려한 실적잔치 뒤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착륙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토목과 건축, 공공과 민간, 국내와 해외의 동반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무더기 퇴직 행렬'은 일상이 됐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 당국이 경쟁적으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남발하면서 “일을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실적 한파

대형사 실적잔치 뒤 경착륙 공포
건설경기 하락세 더 가팔라질 듯

겉으로 보이는 실적은 화려하다. 올해 3분기까지 10대 건설사(기업분할 HDC 현대산업개발 제외)의 영업이익은 총 4조41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4016억원)보다 29.7% 늘었다. 주택시장 활황세 덕분이다.

해외건설 시장도 잇단 '빅배스(big bath)'를 통해 묵은 손실을 한꺼번에 털어냈다. 연간 영업이익 '1조 클럽' 건설사도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최초로 현대건설이 영업이익 1조원(2015~2016년)을 달성한 지 3년 만에 GS건설과 대림산업의 신규 가입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런 환호는 오래 가지 못할 전망이다. 상위 5대 건설사의 3분기 누적 수주 실적은 39조36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6조4702억원) 감소했다. 호황세였던 주택·건축 부문에서 30% 가까이 수주가 줄었다.

대형 건설사와 달리 공공토목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주택 호황'이 낱 얘기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10월까지 누적 수주액이 118조95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다. 공공(-13.8%)과 민간(-2.0%)이 동반 부진했다.

내년에는 하락세가 더 빨라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국내 건설수주가 5년 만에 최저인 135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VR로 보는 재건축 전후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VR 엑스포 2018' 관람객들이 재건축 예정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가상 현실 프로그램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게임을 비롯해 교육, 국방, 의료, 플랫폼 분야 200여개 기업이 참가했다. 안윤수기자 ays77@

구조조정 한파

불안한 실적...일상이 된 인력감축
연말 인사태풍에 무더기 퇴직 행렬

불안한 실적 전망은 일자리와 직결된다. 시공능력 기준 1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만 4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2015년부터 진행된 인력 감축으로 3년 새 2300명 넘게 회사를 떠났지만, 연말까지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림산업도 이달 초 무급 휴직과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 이 회사는 1년 새 400명 가까이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대우건설도 상시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으로 1년 새 400명가량을 줄였다. 플랜트 부문에선 1000여명이 2개월 단위로 유급 휴가제를 시행 중이다.

임원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연말 인사 때 다른 부문보다 많은 9명의 임원을 배출했다. 하지만, 부사장이 한 명도 없었고, 퇴직 임원은 17명에 달했다. 대우건설도 전라기획, 주택건축사업, 토목사업, 플랜트사업 등

핵심 본부장들이 모두 불같이 됐다. 앞서 현대건설도 양대 축인 토목과 건축 본부장을 바꿨다.

대형 건설사들의 인력 구조조정은 건축 자재, 인테리어 등 후방산업에까지 충격을 준다. 이미 3분기 건설투자가 만들어진 일자리 수가 1년 전보다 8만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홍일 건설연 경영금융연구실장은 “건설경기 하락세가 과거보다 2배 이상 빨라졌다”며 “내년 건설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하고, 취업자 수가 9만2000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정 한파

사정당국 잇단 칼날에 '노이로제'
경기침체 속 소송비용도 '눈덩이'

올해만 11번째, 삼성그룹이 또 압수수색을 받았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13~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바

송도 본사와 삼성물산 상일동 본사에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연관성까지 다시 캐려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언제 또 사정 당국이 들이닥칠지 몰라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대림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위기에 처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이해육 대림그룹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기로 하고, 심사보고서를 대림측에 보냈다. 공정위는 대림그룹이 계열사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스, 캠펙 등에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 싸움도 힘겹다. 지난해 말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의 피소 건수는 약 900건으로 1년 전(800건)보다 12% 늘었다. 같은 기간 소송가(3조1087억~4조2222억)는 36%나 급증했다. 삼성물산은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및 LNG 가스주배관 건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1000여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3000억원대 손배소송에 휘말렸다. 김태형기자 kth@

하도급법 위반 벌점 '경감'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입찰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인 하도급법 위반을 경감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기관장 표창, 교육이수 등 5개 경감사유를 폐지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이나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에 따른 경감점수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계는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하도급법은 법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누산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받은 벌점을 공제한 점수를 말한다. 즉, 최근 3년간 5점 이상의 벌점을 받았다더라도, 1점 이상의 감경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면할 수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같은 감경기준이 입찰참가 제한과 영업정지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벌점 경감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12가지로 규정된 경감사유 중 절반에 가까운 5가지를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행정기관장 표창 수상(2점)을 비롯해 △하도급법 교육이수 대표이사 0.5점 △담당입원 0.25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80% 이상 100% 미만, 0.5점) △하도급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 비율 80% 이상(0.5점) 등이 폐지대상이다.

또 6가지 사유에 대한 경감점수는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경감점수를 2점에서 1점으로 줄이는 것을 비롯해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100%) 1점→0.5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3점→2점 △우수 2점→1.5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0.5점→0.25점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활용 0.5점→0.25점 등이다.

이외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양호업체 경감점수는 1점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방안에는 또 공정위의 '사건처리시스템' 개선과 제도 포함됐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개별 제재별 부과일 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벌점이 높은 사업자 수준으로 자동 정렬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벌점 경감기준 정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내년 초부터 곧바로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 경감기준이 개선되면 향후 벌점 경감이 엄격히 이뤄져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대기업 관계자는 "원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원도급사도 고충이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라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정책을 바꾸려면 적어도 계도기간이라도 줘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이미 관계행정기관에 3개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요청했고, 일부 영업정지 요청대상을 포함, 10여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부터 추가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홍승권기자 skbong@

"발주처 갑질행위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다음주부터 시행

시급히 청산돼야 할 생활적폐이면서도 구체적인 개념이나 행위기준이 없어 관행처럼 반복돼 왔던 공공부문 '갑질'이 행위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무원 갑질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내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갑질을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 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그 유형은 공무원→국민을 비롯해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

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 대상별로 명확히 규정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발주처 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인력을 전가하는 행위 등이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중앙·지방행정기관)으로 제정, 운영 중으로, 위반 시 엄격한 제재 및 징계를 받는다"면서 "앞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신고사건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권기자

건협 강원도회, 평창군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은 17일 평창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건협 강원도회는 앞서 이달 4일 인횡성군에 인재육성 장학금 500

만원을 전달했다.

건협 강원도회는 지난달 말에도 강원도 홍천군 소속 회원들과 함께 허필홍 홍천군수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건협 강원도회, 21일까지 '건설공사 실적신고 설명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도내 권역별로 '2018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선 종합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평가를 위한 건설공사 실적신고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기준 등을 설명

한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동향과 실질자본금 설명도 이뤄질 계획이다.

도회 관계자는 "실적신고 자료는 시공능력평가는 물론 공공공사 입찰자료로도 활용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